

(참고자료-참조74)

기호일보

HOME > 정치 > 자치/행정

고양시 "예산 대비 효과 미약" 내년 '청년기본소득' 불참

재정난 심각한데 시비만 40억 원 "취·창업 지원 등 다른 정책 고민"

경기도 예산안 수정 불가피... '사업 지속가능성 담보' 방안 찾아야

고양시가 내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.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 사업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.

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불참은 성남·의정부에 이어 세 번째다. 사업에서 이탈하는 지자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.

1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. 청년기본소득에 불참하겠다는 뜻으로, 이 예산안이 그대로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고양시민들은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지 못한다.

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한 반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불참을 결정했다. 또 도가 내놓은 청년기본소득 개편안 역시 청년의 기본권 보장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.

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비만 4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. 고양시는 이 예산을 청년 취·창업 지원에 사용해 사회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.

고양시 관계자는 "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재정난이 심각한데, 청년기본소득은 투입 예산이 크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봤다"며 "대신 청년 취·창업 지원 등 보다 직접적으로 도를 정책을 고민 중"이라고 했다.

자료화면 2